

최근 양극화 추이와 시사점

설 윤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seoly@keri.org)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가계소득, 기업, 지역 간 양극화의 추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소득 5분위배율로 살펴본 소득양극화는 2008년을 정점으로 최근 2년 동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불균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또한 2007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09년부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대기업과의 격차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내 총생산으로 살펴 본 수도권·비수도권의 양극화는 2007년 이후로 오히려 비수도권의 총생산이 수도권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추이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감세 정책 등의 친시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즉 감세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중산층이며 이로 인해 중산층 복원을 통한 양극화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감세 정책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계소득, 기업, 지역 간 등 모든 사회 영역의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1. 문제의식

-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대표적인 소득양극화뿐만 아니라 기업, 지역 간 양극화 심화현상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함.
 - 또한 최근 불거진 논쟁 중의 하나인 감세 정책이 소득양극화와 불균등도를 더욱 심각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함.

2. 소득양극화와 및 불균등도 추이

- 소득양극화와 불균등도는 개념상 차이가 존재
 - 소득양극화는 소득분포가 특정 수준을 중심으로 두 개의 양 극단으로 집락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하게는 소득 5분위 배율¹⁾로 심화의 여부를 판단함.

1)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5분위) 계층을 하위 20%(1분위)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소득 5분위 배

- 소득의 편차를 중심으로 소득의 불평등도만을 강조하는 지니계수와는 차이가 있는 개념임.
- 소득 5분위 배율은 2008년을 정점으로 최근 2년 동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은 2003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최근에는 하락세로 반전됨.
 - 2010년 시장소득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은 6.03을 기록하여 2009년의 6.14에 비해 감소함.
 - 또한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은 4.81을 기록하여 2009년 4.95에 비해 감소함.
 - 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 참여정부(2003~2007년) 기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2008년 6.16을 고점으로 하락세로 반전됨.
 - 도시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은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 모두 다소 감소함.
 - 2010년 시장소득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은 6.02를 기록하여 2009년의 6.11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은 4.82로 2009년의 4.97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참여정부(2003~2007년) 기간을 포함하여 2009년에 고점을 기록한 이래 2010년에는 감소세를 기록함.
- 소득 10분위 배율²⁾은 2003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최근에는 하락세로 반전됨.
 - 전 가구 대상의 소득 10분위 배율은 2003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최근에는 하락세로 반전됨.
 - 2010년 시장소득 기준 소득 10분위 배율은 4.97을 기록하여 2009년의 5.06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 10분위 배율은 4.07로 2009년 4.22에 비해 감소함.
 - 소득 10분위 배율은 지난 참여정부(2003~2007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2008년 5.08을 기록한 이래 하락세로 반전됨.
 - 도시가구의 소득 10분위 배율은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 모두 다소 감소함.
 - 2010년 시장소득 기준 소득 10분위 배율은 4.90을 기록하여 2009년의 5.02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 10분위 배율은 4.08을 기록하여 2009년의 4.21에 비해 감소함.
 - 전 가구 기준과 마찬가지로 2009년 고점을 기록한 이래 2010년에는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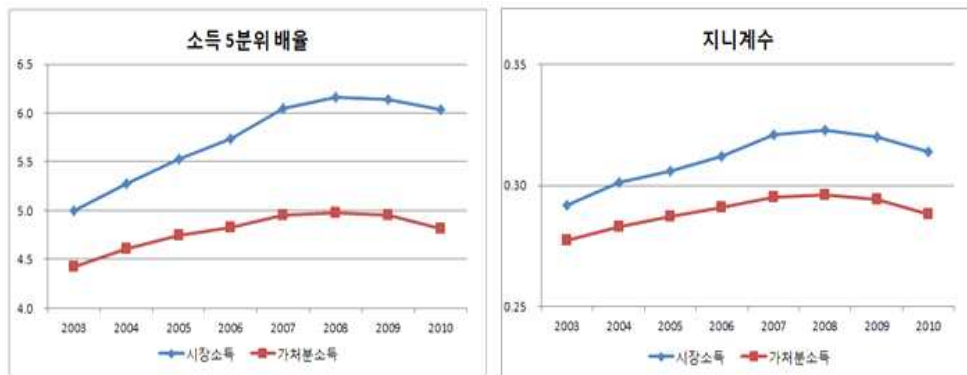
울이 커지면 상위소득과 하위소득의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해석되어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판단함.

2) 소득 10분위 배율은 상위 10%(10분위) 계층을 하위 10%(1분위)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됨.

- 소득 불균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3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최근에는 하락세로 반전됨.
 - 전 가구 대상으로 한 지니계수는 2008년까지 꾸준히 상승했으나 이후 하락세로 전환됨.
 - 2010년 시장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는 0.314로 2009년의 0.320에 비해 낮아짐.
 - 또한 2010년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88로 2009년의 0.294에 비해 다소 낮아짐.
 - 지니계수는 2003년에서 2008년까지 꾸준히 상승했으나 2009년 이후 하락세로 전환됨.
 -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니계수 또한 2009년까지 상승하다가 2010년에는 하락함.
 - 2010년 시장소득을 이용한 지니계수는 0.315로 2009년의 0.320에 비해 하락하였으며, 가처분소득을 이용한 지니계수 또한 0.289로 2009년의 0.295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 가구와 다르게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니계수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나, 2010년에는 상승세가 꺾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소득양극화 및 불균등도의 추이

(단위: 배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3. 대기업과 중소기업³⁾의 양극화 추이

- 매출액 영업이익률로 살펴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최근에 격차가 감소하고 있음.
 -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09년에 6.54%, 중소기업은 5.58%의 증가율을 기록함.
 -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06년 5.98%의 저점을 기록한 이래 현재까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류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표적 업체수를 대상으로 한 기업경영분석을 인용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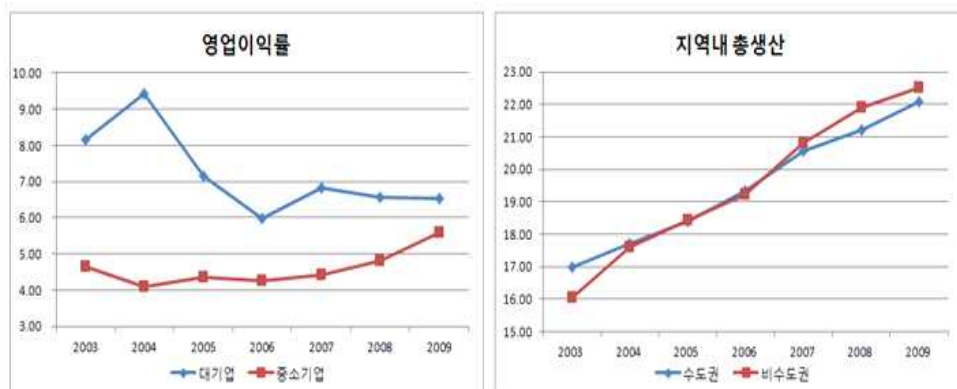
-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지난 참여정부(2003~2007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8년 4.82%와 2009년 5.58%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면 2009년 기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은 8.3%, 협력업체는 6.1%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협력업체의 영업이익률이 전체 중소기업의 5.6%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추이

- 지역 내 총생산으로 살펴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는 존재하지 않음.
 -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수도권이 2003년 대비 29.8%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4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2003년 기준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1,700만 원이었으며, 2009년은 2,207만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은 2003년에 1,605만 원을 기록하였으며 2009년에는 2,252만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이래로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 내 총생산은 수도권 지역의 총생산에 상회하고 있음.
 - 2010년 고용률은 수도권이 58.95%, 비수도권은 58.92%를 기록함.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고용률 격차는 2007년 0.44%p를 기록한 이래 감소하여 2010년 현재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함.

<그림 2> 대·중소기업 및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의 추이

(단위: %, 백만 원)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5. 요약과 시사점

- 소득양극화와 불평등도는 소득변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존재하나 전체적으로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참여정부(2003~2007년) 동안 급격히 상승세를 보이던 소득양극화와 불평등도는 최근 2009년과 2010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줌.
 - 2008년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양극화 혹은 불평등도가 오히려 심각하게 진행되지 않았음.
 -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비수도권과 같은 다른 사회 영역의 양극화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대기업과의 격차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
 - 2007년 이래로 비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이 오히려 수도권 지역의 총생산에 상회하여 총생산 기준으로 본 양극화는 전혀 심각한 수준이 아님.⁴⁾
- 최근 나타난 양극화의 감소 현상은 지난 참여정부와 비교하여 정책 효과에 기인됨.
 - 중소기업, 서민정책 등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특히 소득세, 법인세 감면의 감세 정책 등 친시장 정책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풀이됨.
 - 조세부문의 감소는 가처분소득 개선으로 나타났으며 감세 정책으로 인해 소득 상위 계층보다 중산층이 더 큰 수혜를 입음.
 - 2007년과 2008년을 비교하면 상위 10%의 하위 10% 세액배율⁵⁾은 719배에서 759배로 증가하였으며, 소득 5분위 배율과 10분위 배율의 감소한 사실로부터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여러 가지 방안이 존재할 수 있으나 양극화 해소를 위해 현재의 감세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장기적인 경제침체는 소득 상위계층보다는 하위 계층에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통한 경제 활성화만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지름길임.

4) 이러한 결과는 지역경제를 대표할 수 있는 총생산 기준이며, 전체적으로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가 없다는 결론은 아니다. 여러 변수를 이용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비교·가능할 것임.

5) 세액배율=상위 10% 1인당 세액/하위 10% 1인당 세액